

‘약자인 농민들의 피해를 보살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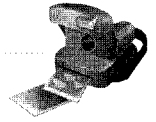
전국 낙농농민들,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 제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업체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6월 30일(수) 전국의 낙농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였다.

이날 공정위에 제출된 낙농농민들의 탄원서는 협회가 6월초부터 전국 낙농농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공정위는 2008년도 당시 사료값 폭등을 비롯한 생산비 폭등으로 목장원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유가공 업체가 일제히 우유값을 올린 것과 최근 시중에서 ‘우유 감아팔기’가 중단된 것 등을 바탕으로 우유시장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낙농농민들은 우유의 특성상 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일뿐더러 우유 재생산이 가능토록 우유 생산비를 기초로 한 목장원유가격 결정 등 정부가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통해 낙농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이러한 낙농특성과 예상되는 농가 피해를



인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시켜 주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낙농농민들은 탄원서에서 “한국의 낙농산업은 연이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추진과 구제역 발생 등으로 낙농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우유는 매일 목장에서 생산되고 보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품으로 생산 즉시 판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한 번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낙농농민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로 인해 경영구조가 취약한 유가공업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농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우유의 특성상 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유 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에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우유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낙농농민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농식품부와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조사에 선처를 요구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위와 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인 낙농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가격 담합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라나당 김성수 의원 역시 지난 6월 21일(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식품부 업무현황보고회에서 낙농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가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약자인 농민의 피해를 보살펴 주소서!

공정위 우유시장 불공정조사에 대한 전국 낙농농민들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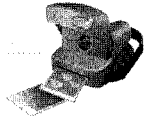
우리 낙농농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은 서민을 위해서도, 농민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값 못 받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다시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분명 짊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유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모 언론에서 유업체에 대한 수백억 과징금 부과가 보도되면서 전국 낙농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저장성이 없는 우유는 목장에서 매일매일 짠 젖을 가지고, 우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버려야 하는 식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농민들은 절대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낙농특성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낙농선진국에서도 약자인 농민의 거래교섭력 유지, 우유 재생산이 가능토록 우유생산비를 기초로 한 원유가격 결정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 같은 낙농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우유가격, 우유덤판매 중단, 단체급식 문제는 이러한 낙농특성에 따라 농림부처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낙농농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유가공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결국 농민들의 피해로 메워진다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낙농선진국과의 FTA에 이어 우유시장의 특성과 약자인 농민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결정할 경우 농민들을 벼랑으로 등 떠미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전국 낙농농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유시장 불공정조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오늘 그 간절하고 정당한 바램을 공정위에 전달코자 한다. 공정거래, 시장경제의 출발점은 정의에 있다. 이것이 산업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겉데기만 남을 뿐 결과는 선량한 약자들의 희생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공정위는 보살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우유시장 불공정 조사 선처를 요구하는 전국 낙농농민 일동



탄 원 서

우유 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들은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를 생산하는 전국의 낙농농민으로서 보다 더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와 쇠고기를 생산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농산업은 연이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추진과 구제역 발생으로 낙농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통점에서는 업체 간 우유, 유제품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과 이에 따른 시장왜곡으로 낙농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농은 한때 농업의 꽃이라 불릴 만큼 1970년대 정부차원의 육성책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만, 1995년 WTO출범이후 소위 개방농정으로 인한 저가의 유제품 수입확대로 인해 쇠약국면에 접어든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이에 한때 3~4만호에 육박했던 농가수는 이제 고작 6천호 남짓밖에 남지 않아,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반 유지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귀 위원회에서 우유의 특성상 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공업체의 불공정 거래 조사 미명하여 우유가격 담합문제, 단체급식 전반에 걸쳐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낙농의 특성을 무시한 채 귀 위원회가 일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경영구조가 취약한 유가공업체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낙농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유는 매일 목장에서 생산되고 보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품으로 생산 즉시 판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한번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회복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낙농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며, 향후 낙농정책 방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농민들의 희생과 감내를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 낙농농민들의 염원과 뜻을 담아, 귀 위원회에 우유 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요청 드리오니, 급변 조사결과의 향방이 우리나라 낙농산업과 낙농농민들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0년 6월

낙농가 외 명

공정거래위원장 귀중